

“고객데이터 진입장벽 낮춰 핀테크·창업 등에 활용”

» 1면 'CB사·카드사에도 빅데이터 업무 허용'서 계속

빅데이터서비스, 부수업무로 명확화

또 CB사·카드사가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현행 CB사는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앞으로 CB사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해 평가모델 고도화 최대화= 등 개인신용평가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카드사도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VISA 카드는 고객의 동의하에 타겟 고객의 결제 위치·시점·구입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근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프로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제공한다. 표본 DB를 제공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800만명 육박 '사상 최대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 1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는 수요가 꾸준히 급증한 영향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신고자는 지난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명,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는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는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는 34만5292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한줄뉴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 ▲ 여당은 19일 중앙당 공천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며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야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 ▲ 오는 21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서거 17주기가 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 명예회장의 '도전' 정신이 최근 혼돈에 빠진 한국 기업들에 또 다시 강조되고 있다.
-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들고 나온 데이터 요금제 개편안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끌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 ▲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 ▲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 20개국(G20) 대표지수 중 7위를 기록했다.

당국,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특화 CB(신용평가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 CB사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벽을 낮춘 대신 정보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처리에 따라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보장한다.

◆ CB사 진입 문턱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종합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기로 했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해 CB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CB사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 이상)을 제외한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 개인 CB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업 CB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한다.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유류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는 현행 50억원에서 개선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

제한다. 또 본인인증업무, 평가모형 개발 및 판매 업무 등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한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한다. 이 업종은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본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비롯해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허용된다. 자본금요건은 1억원으로 최소화하고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은 의무화한다.

◆ 정보보호는 주체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정보보호

는 내실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한다. 금융보안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산정·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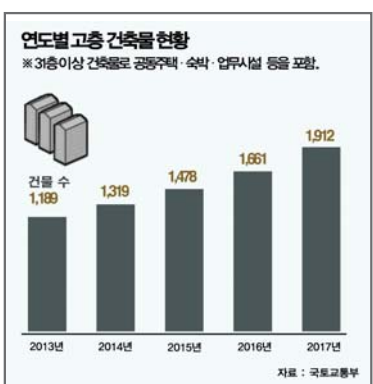
또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한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나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또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금융회사 3429개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8개 대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점검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해운대·송도·청량리, 초고층 랜드마크 줄줄이 대기

내달부터 초고층 물량 공급 주거환경·입지 뛰어나 인기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재개발에 들어가는 서울 청량리 등에서 랜드마크 단지가 다음달부터 분양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3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912개 동으로 2016년 대비 251개 동이 늘었다. 전체 건축물 중 31층 이상 초고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0.017%에서 2017년 0.026%로 증가했

다. 고층 건축물은 대부분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다.

고층아파트는 주거환경과 입지가 뛰어나 청약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양산에서 분양한 금호건설 '양산 금호리첸시아(44층)'는 평균 20.36대 1,

최고 40.32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쏟아지는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은 오는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49층 초고층 단지인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총 5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일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걸어서 3분거리다.

롯데건설은 오는 4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서 지역내 최고층으로 짓는 '청량리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65층, 5개 동 총 1900가구 규모

다. 아파트 1372가구, 오피스텔 528실로 이뤄진다.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금성백주주택은 오는 4월 동탄2신도시 C7블록에서 47층 초고층 단지인 '동탄역 금성백주 에미지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1㎡ 아파트 498가구와 전용면적 22㎡ 오피스텔 420실 등 총 918가구 규모다.

대방건설은 오는 5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48층 초고층 단지인 '인천송도1차대방디엠티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236가구 규모로 이어진다. 이중 아파트 580가구와 오피스텔 656실로 이뤄진다. /이규성 기자 peace@

R&D 지원금 4억~5억 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과기정통부 등 11개 부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R&D 재원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

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 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

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